

신독(愼獨)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 -다산 정약용의 성찰적 실천 원리를 중심으로-

황미혜 · 최리파 · 하명희**

(부산외국어대학교 · 동아대학교 · 동국대학교)

1. 서론
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
3.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설계
4.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책 적용과 운영 체계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정책 전 과정에 내재화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정책의 새로운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산 정약용의 신독(愼獨), 서(恕), 추서(推恕)를 성찰적 실천 원리로 재해석하고, 센(Sen)의 역량접근법과 연계하여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책임성을 구현하는 규범 원리로, 서와 추서는 이주민의 역량과 삶의 맥락을 존중하는 관계적 실천 원리로 체계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정책 기획, 설계,

* 이 논문은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C2A02022622)

** 제1저자: 황미혜, 공동저자: 최리파, 교신저자: 하명희

집행, 평가, 환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산의 실천철학과 역량접근법을 통합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 인간 중심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규범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디지털 전환, 신독, 다산 정약용,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역량접근법

1. 서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은 공공행정과 사회서비스 전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구조적으로 배제될 가능성 또한 확대된다(Grigoropoulou 2021). 그중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¹⁾ 출신 이주민은 디지털 접근성, 사회경제적 취약성, 문화적 차이 등이 중첩되면서 기술적 소외와 사회적 배제를 동시에 경험할 위험이 높아진다(Kim et al. 2021; Jobin et al. 2019).

최근 AI 윤리와 디지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Jobin et al. 2019; Floridi et al. 2018). 이 세 가지 중심 논의는 보편적 윤리원칙의 제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맥락과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1)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는 전통적인 제3세계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넘어, 현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주민의 출신 국가군이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사용하였다(진윤주 외 2025; Dados, N., & Connell, R. 2012).

다는 한계를 지닌다(Sarrasin et al. 2015). 다문화정책 연구 역시 사회통합, 수용성, 차별 해소 등의 제도적 논의에는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 편향과 윤리적 의사결정 문제를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은 다산 정약용의 실천철학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약용은 『논어고금주』에서 서(恕)²⁾를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마음으로 헤아려 실천하는 관계윤리로 이해하였으며, 『대학공의』에서는 신독(愼獨)³⁾을 외적 규율이 아닌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찰하는 도덕적 수양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자기수양이 공적 제도의 운영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산에게 신독은 개인의 내면적 성찰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향하는 실천윤리의 출발점이며, 개인의 도덕성과 제도 운영을 연결하는 핵심 원리로 파악된다(안외순 2010; 이승형 2025).

본 연구는 이러한 다산의 사상적 토대를 현대 디지털 사회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에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신독을 현대의 기술적 알고리즘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디지털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성찰 원리이자 규범적 판단 기준으로 재해석한다. 또한 다산의 서(恕)와 추서(推恕)를 센(Sen)의 토대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이하 역량접근법)과 연계하여, 이주민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행위주체(agency)로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먼저 안외순(2010), 이승형(2025), 이영경(2011) 등의 선행연구와 『논어

2) ‘서(恕)’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추서(推恕)’의 실천 원리를 내포하는 유교적 관계 윤리의 근본 정신이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선의를 넘어, 타자의 고통과 주체성을 인지하고 나의 행위를 성찰적으로 정렬(Alignment)하는 상호적 관계 윤리를 의미한다(안외순 2010). 본 연구에서는 ‘서(恕)’를 이주다문화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가치적 토대로 삼고, 그 실천 기제인 ‘추서(推恕)’를 신독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로 정의하여 개념적 층위를 구분하였다.

3) 신독(愼獨):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유교적 수양론(정약용 저, 이지형 역 2010). 본 연구는 이를 현대 AI가 외부 통제 없이 자체적으로 윤리적 정렬(Alignment) 상태를 유지하는 내재적 자가 감시 기제로 재개념화하였다.

고금주』를 중심으로 다산의 신독, 서, 추서의 사상적 의미를 검토하였다(정약용 저, 이지형 역 2010). 이어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접근법, 다문화정책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와 학문적 공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개념적으로 설계하였다.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디지털 전환기 이주민은 어떠한 구조적 배제와 온정적 차별⁵⁾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존 디지털 거버넌스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둘째, 다산 정약용의 서, 추서, 신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적 원리로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는가? 셋째, 다산의 실천철학과 역량접근법을 결합한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개별적으로 논의해 온 다산철학, 인공지능 윤리, 역량접근법,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하나의 통합적 분석틀로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차별성을 지닌다. 신독을 기술적 알고리즘이 아닌 윤리적 성찰의 규범 원리로 재해석하고, 이를 다문화 거버넌스의 설계 원리와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 중심의 공정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

2.1. 다산 정약용의 신독과 성찰적 실천 원리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자기수양을 사회적

4) 기존의 이주 모델들은 신고전주의 모델(Neoclassical Model), 푸시-풀 모델(Push-Pull Model), 글로벌 이주시스템 이론(Global Migration System Theory) 등이 대표적이다(Castles, S. et al. 2005).

5) 온정적 차별(Benevolent Prejudice)이란 이주민을 무력하고 의존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인 시혜와 보호를 베푸는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선의를 가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부정하고 구조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통제적 기제로 기능한다(Smilán-Goldstein 2024; Menjivar & Kil 2002).

실천과 제도 개혁으로 연결하는 실천철학에 기반한다. 신독은 다산 윤리 사상의 핵심 개념으로서 개인의 내면적 성찰을 넘어 공적 책임성과 사회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토대를 형성한다. 따라서 신독은 단순한 심리적 자기반성이나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하는 관계윤리의 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외순 2010; 이영경 2011).

신독은 『대학』에서 비롯된 개념이지만, 다산은 『대학공의』에서 주희의 해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실천철학으로 재구성하였다. 주희가 신독을 마음속의 사욕을 경계하는 내면적 수양의 문제로 이해하였다면, 다산은 인간이 홀로 있을 때에도 상제(上帝)를 공경하고 자신의 행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도덕적 실천으로 확장하였다(조미경 2023; 이영경 2011). 이처럼 신독은 외부의 감시나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윤리적 자기통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신독을 개인의 도덕성에 한정하지 않고 공직자의 책무와 공공성의 문제로까지 확장하였다.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 나타난 그의 행정철학은 개인의 자기수양과 제도 운영이 분리될 수 없으며, 공직자의 도덕성이 곧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한형조 2021; 안외순 2010). 이는 개인의 윤리적 성찰이 사회 운영의 원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다산 실학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천윤리는 『논어고금주』에서 논의한 서와 추서의 개념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안외순(2010)은 다산이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서를 관계윤리로 이해하였으며, 그 이해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추서를 윤리 원리로 확장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신독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라면, 서와 추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관계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상호보완적 원리라 할 수 있다(안외순 2010; 한형조 2021).

최근 다산 연구 역시 신독을 심리적 자기성찰이 아니라 도덕적 주체성과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는 실천윤리로 재해석하고 있다(이영경 2011; 김태영 2022). 안외순(2010)은 『논어고금주』를 중심으로 다산의 서 사

상이 관용과 관계윤리의 철학적 토대를 형성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영경(2011)은 신독을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산이 유교의 전통적 자기수양을 공공성과 실천성을 지향하는 윤리체계로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 윤리는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핵심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Jobin et al. 2019; Floridi et al. 2018).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기술적 설계와 제도적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다산의 신독은 기술 자체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독을 현대의 기술적 알고리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신독은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에서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정책의 기획,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규범적 원리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은 다산의 실천철학이 지닌 역사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중심의 공정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2. 역량접근법과 이주다문화정책

디지털 전환은 공공행정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AI, 빅데이터,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재생산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O'Neil 2016; Eubanks 2018). 이주민과 난민, 결혼이주민 등 다문화 구성원은 언어, 문화, 체류 자격,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UNESCO 2021).

기존의 인공지능 윤리 연구는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Jobin, Ienca, & Vayena 2019; Floridi et al. 2018). 이러한 연구는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윤리적 판단을 주로 기술 설계와 제도적 규범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디지털 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와 행정 주체가 어떠한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다문화수용성, 사회적 자본, 시민권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해 왔다(Ager & Strang 2008; Berry 1997).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적 지원체계와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나타나는 자동화된 행정과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이 이주민의 권리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주민을 정책의 수혜자 또는 관리 대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여,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주체(agency)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역량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섰(1999)은 복지의 수준을 단순한 자원의 분배가 아니라 개인이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y)의 확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누스바움(Nussbaum 2011)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과 사회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주민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행위주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문화정책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다만 역량접근법 역시 개인의 자유와 역량을 강조하는 데 비해, 디지털 사회에서 정책결정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과 관계적 성찰의 문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역량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행정 주체의 윤리적 판단과 관계적 책임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신독, 서, 추서는 중요한 이론적 보완 가능성을 제공한다. 신독은 정책결정자가 외부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스

스로를 성찰하고 공공성을 실천하는 윤리적 원리이며, 서와 추서는 정책 대상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관계윤리의 원리이다. 안외순(2010)은 『논어고금주』를 중심으로 다산의 서를 관계윤리와 관용의 실천 원리로 해석하였으며, 조미경(2023)은 『대학공의』에 나타난 신독을 자기성찰과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다산의 실천철학은 역량접근법이 강조하는 행위주체성과 결합될 때,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역량접근법, 다산의 실천철학을 상호 대체적인 이론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분석틀로 이해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제도와 기술의 규범을 제시하고, 역량접근법은 이주민의 행위주체성과 역량을 설명하며, 다산의 신독과 서, 추서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원리, 서와 추서는 정책 대상자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관계윤리의 원리로 기능하며, 역량접근법은 이러한 윤리적 성찰이 이주민의 실질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통합적 접근은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가 기술 중심의 효율성에서 인간 중심의 윤리성과 공공성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표 1〉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기존 연구	본 연구
AI 윤리	공정성 · 책임성 · 투명성 중심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포함한 거버넌스 원리 제시
역량접근법	개인의 역량과 행위주체성	행위주체성과 윤리적 성찰을 통합한 거버넌스 모형 제안
다문화 거버넌스	제도 운영과 사회통합 중심	디지털 전환과 윤리적 공공성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
다산 연구	신독의 철학적 의미 분석	신독을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윤리적 성찰 원리로 재해석

출처: 조미경(2023), 안외순(2010), Jobin et al.(2019), Sen(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2.3. 디지털 전환과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기술적 효율성과 제도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책임성과 관계적 성찰을 함께 요구한다. 공공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 운영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Ansell & Gash 2008; Emerson, Nabatchi, & Balogh 2012).

거버넌스 이론은 국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체계를 강조한다(Rhodes 1997). 최근 디지털 거버넌스 역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활용을 넘어 참여성, 책임성,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제도 설계와 기술적 관리 체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성찰과 도덕적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다산 정약용의 실천철학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영경(2011)은 『대학공의』에 나타난 신독을 도덕적 자율성과 자기성찰의 핵심 원리로 해석하였으며, 조미경(2023)은 신독이 인간의 인성과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형조(2021)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 나타난 다산의 행정철학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윤리로 전개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신독이 개인의 내면적 수양을 넘어 공공정책과 행정 운영의 윤리적 기준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산의 실천철학은 개인의 도덕적 성찰과 제도 운영을 상호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수양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며, 공공제도는 이러한 윤리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실천 공간으로 이해된다. 신독은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결정자와 행정 주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도록 요구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기능한다(이영경 2011; 조미경 2023).

안외순(2010)은 『논어고금주』를 중심으로 서를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관계윤리의 원리로, 추서를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윤리 원리로 설명하였다. 신독이 정책결정자의 자기 성찰이라면, 서와 추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관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관계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⁶⁾ 실천철학은 역량접근법과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역량접근법이 이주민의 실질적 선택 능력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면, 다산의 실천철학은 그러한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가 어떠한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역량접근법이 정책의 목적을 제시한다면, 신독, 서, 추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실천 원리를 제공한다.

다산의 실천철학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공적 책임을 확보하는 규범 원리이다. 둘째, 서와 추서는 이주민의 삶의 맥락과 행위주체성을 존중하는 관계윤리의 원리이다. 셋째, 역량접근법과 결합된 신독 기반 거버넌스는 이주민의 실질적 역량 증진과 공정한 정책결정을 연결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원리로 기능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는 다산의 신독, 서, 추서를 현대의 기술적 알고리즘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들 개념은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정책의 기획,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규범적 거버넌스 원리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설계 원리이자 작동 논리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6) 정약용의 『논어고금주』 원전의 서(恕) 사상을 현대 철학적 담론으로 확장한 안외순(2010)과 이영경(2011)의 해석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개념이다. 다산학에서 서는 자기를 미루어 타인을 헤아리는 능동적 주체성을 내포하므로, 본 연구는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소수자의 맥락적 레이블링을 수행하는 실천적 원리로 간주할 수 있다.

3.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설계

3.1. 신독 기반 거버넌스의 설계 원리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산 정약용의 실천철학을 토대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한다. 본 모형은 다산의 신독, 서, 추서를 현대의 기술 개념으로 치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과 디지털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성찰의 규범 원리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재현 2021).

기존의 디지털 거버넌스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참여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였다(O'Neil 2016; Eubanks 2018). 이주민 정책 방면은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이주민이 정책의 대상(object)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주체(agent)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량접근법과 다산의 실천철학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였다. 역량접근법은 이주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와 역량을 강조하는 반면, 다산의 실천철학은 그러한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과 공공성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거버넌스 모형은 행위주체의 역량 강화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동시에 구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산의 실천철학을 세 가지 윤리 원리로 구조화하였다.

첫 번째, 신독의 원리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공적 책임을 확보하는 규범 원리이다. 신독은 외부의 통제 이전에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판단과 가치편향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정책이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숙고하도록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다(이영경 2011; 조미경 2023). 이러한 성찰은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책임성과 설명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두 번째, 서의 원리는 정책 대상자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관계윤리의 원리이다. 안외순(2010)은 『논어고금주』를 중심으로 서를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관계윤리의 핵심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획일적인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문화·사회적 배경을 가진 행위주체로 이해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경험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토대가 된다(안외순 2010).

세 번째, 추서의 원리는 관계적 이해를 정책과 제도의 실천으로 확장하는 원리이다. 추서는 정책결정자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실천윤리이며, 이주민, 지방정부, 시민사회, 공공기관이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참여적 구조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하는 공동 의사결정 원리와의 맥락을 같이 한다(Ansell & Gash 2008).

이 세 가지 원리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구조를 형성한다. 정책결정자는 신독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성찰하고, 서를 통해 정책 대상자의 삶의 맥락과 요구를 이해하며, 추서를 통해 이를 정책과 제도로 구현한다. 정책 시행 이후의 평가와 환류는 다시 신독의 성찰 과정으로 연결되어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기술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이주민의 행위주체성, 공공성의 실현을 하나의 순환적 거버넌스 체계로 통합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이러한 설계 원리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3.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기술적 효율성과 행정적 합리성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실

현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은 데이터 편향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O'Neil 2016; Eubanks 2018). 이에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실천철학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통합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한다. 모형은 신독, 서, 추서를 개별 개념이 아니라 정책결정과 정책 운영 전 과정에서 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윤리적 실천체계로 구조화하였다.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자기성찰, 서는 정책 대상자의 삶의 맥락에 대한 관계적 이해, 추서는 이러한 이해를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는 실천 원리를 의미한다(안외순 2010; 이영경 2011; 조미경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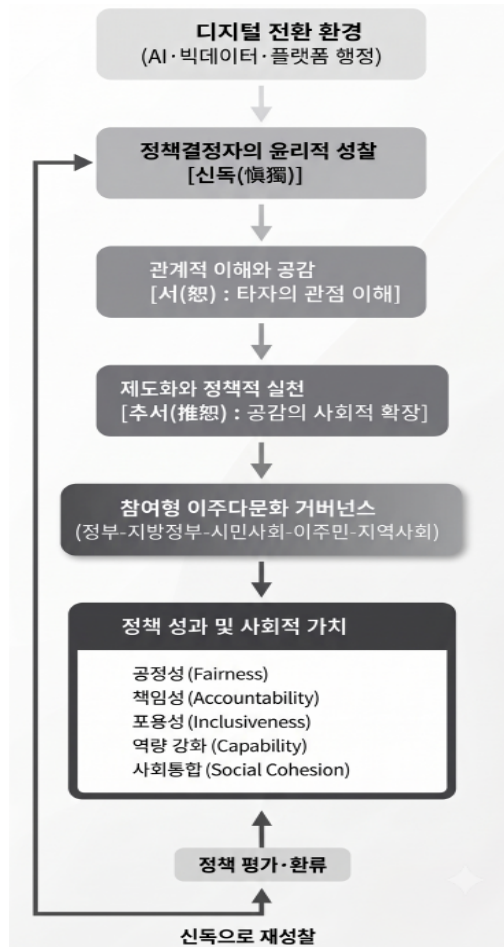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에서 출발하여 관계적 이해를 거쳐 제도적 실천으로 연결되고, 정책 평가 결과가 다시 성찰 단계로 환류되는 순환적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환류 구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편향과 구조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기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정책결정자는 신독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판단과 정책 과정에 내재할 수 있는 편향을 성찰하고, 서의 원리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삶의 경험을 이해하며, 추서의 원리를 통해 이러한 이해를 정책 설계와 집행에 반영한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평가 결과를 다시 정책결정 과정으로 환류시켜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순환 구조는 기존 디지털 거버넌스가 강조해 온 기술적 효율성과 행정적 합리성을 넘어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책임, 관계적 공공성,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모형은 역량접근법과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역량 접근법이 이주민의 실질적 선택 능력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다면, 신독 기반 거버넌스는 그러한 역량이 정책 과정에서



〈그림 1〉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공공성을 제도 운영의 핵심 원리로 제시한다. 역량접근법이 정책의 지향점을 설명한다면, 신독 기반 거버넌스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원리를 제시한다(Sen 1999; Nussbaum 2011).

본 모형은 기존 다문화 거버넌스 연구와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이주민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에 참여하

는 행위주체로 위치시킨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디지털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셋째, 정책 기획·설계·집행·평가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환류 중심의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이주민의 행위주체성, 공공성을 하나의 순환적 운영체제로 통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규범적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공공정책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설계 원리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3.3. 신독 기반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단순한 규범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윤리적 성찰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운영체제를 지향한다. 기존의 디지털 거버넌스가 기술적 효율성과 행정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면, 본 연구의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이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결합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는 신독의 원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정책결정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정책이 이주민의 권리, 사회통합, 공공성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은 정책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편향과 구조적 차별을 사전에 점검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기능한다(이영경 2011; 조미경 2023).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서의 원리가 적용된다. 서는 정책 대상자의 삶의 맥락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관계윤리의 원리이며(안외순 2010), 디지털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요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참여적 과정으로 구현된다. 이를 위해 이주민, 지방

정부, 시민사회, 교육기관, 기업 등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Ansell & Gash 2008).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추서의 원리가 실천된다. 추서는 관계적 제도를 제도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원리로서(안외순 2010), 정책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에서는 언어 접근성, 정보 접근성, 디지털 활용 역량 등을 고려한 포용적 서비스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UNESCO 2021).

정책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다시 신독의 원리가 작동한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성과평가를 단순한 행정지표나 이용률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 역량 증진, 사회적 신뢰 형성 등 질적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Sen 1999). 또한 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성찰과 정책 개선으로 환류되어 거버넌스 전 과정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순환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운영 메커니즘은 기존 디지털 거버넌스와 비교하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술의 객관성보다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책임을 우선한다. 둘째, 이주민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로 위치시킨다. 셋째, 정책의 성과를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신뢰, 역량 확대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운영 원리는 역량접근법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역량접근법이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선택 가능성의 확대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다면, 신독 기반 거버넌스는 그러한 목표가 정책 운영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운영 원리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역량접근법이 정책의 지향점을 설명한다면, 신독, 서, 추서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정책 기

획-정책 설계-정책 집행-정책 평가 및 환류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내재화하는 순환적 운영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의 책임성과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운영 원리는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디지털 거버넌스의 규범적 기준으로 재해석하여 정책 운영의 전 과정에 적용 가능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및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향후에는 다양한 지방정부와 이주다문화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본 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책 적용과 운영 체계

4.1.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책 적용 방향

앞서 제시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규범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 설계와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틀을 제공한다. 현재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행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과 자동화가 강조되는 과정에서 이주민의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UNESCO 202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행정체계를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이주민의 행위주체성, 사회적 책임을 정책 운영 전 과정에 내재화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권리,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형평성

을 함께 고려하는 윤리적 영향평가(Ethical Impact Assessment)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잠재적 편향과 차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O'Neil 2016; Jobin et al. 2019).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특성과 이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이주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계적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Ansell & Gash 2008). 참여 구조는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교육기관과 대학은 디지털 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계하여 미래 정책결정자와 공공인력이 윤리적 성찰 역량과 디지털 책임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 사회복지,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함께 윤리적 판단 능력을 균형 있게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역사회는 이주민을 정책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정책 형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로 인정하는 참여 메커니즘을 확대해야 한다.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정책협의체를 비롯하여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참여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적용 방향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는 대신,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운영의 기준을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기술과 인간, 효율성과 윤리성, 행정과 시민참여를 상호 대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정책은 행정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이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과 공정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4.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제도화 전략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정책모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원리를 정책 운영체제와 제도적 장치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독, 서, 추서를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 공공정책의 운영원리로 재해석하였다. 제도화의 핵심은 이러한 윤리적 원리가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첫째, 윤리 기반 정책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의 정책평가는 예산 집행, 사업 실적, 이용률 등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주다문화정책은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 포용성, 참여성, 사회적 신뢰와 같은 질적 성과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 지표에 이주민의 참여 수준, 정책 접근성, 문화적 적합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참여형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주민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Sen 1999).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주민 대표, 시민사회 단체, 교육기관,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참여 구조는 다산이 제시한 서와 추서의 관계윤리를 현대 공공행정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안외순 2010; 한형조 2021).

셋째,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의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일부 이주민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UNESCO 2021). 다국어 서비스 확대, 쉬운 언어(Plain Language) 적용, 디지털 역량 교육, 접근성 중심의 플랫폼 설계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윤리적 정책결정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자기성찰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윤리 원리로 이해되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조미경 2023; 이영경 2011). 이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행정, 다문화 감수성, 공공윤리 등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 중심의 행정이 인간 중심의 공공행정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주다문화정책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역공동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Ansell & Gash 2008).

제도화 전략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윤리적 성찰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효율성과 공정성, 기술과 윤리,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표 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제도화 전략 및 기대 효과

전략	핵심 원리	주요 실행 내용	기대 효과
윤리 기반 정책평가	신독	공정성·포용성 평가 지표 도입	정책 책임성 강화
참여형 거버넌스	서	이주민 참여 제도화	정책 대표성 확대
디지털 포용성	추서	다국어 서비스·디지털 역량 지원	접근성 향상
윤리교육	신독	공공인력 AI·다문화 윤리교육	윤리적 정책결정 강화
협력 네트워크	서, 추서	정부-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출처: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도화 전략은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행정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다산 연구에서 제시된 신독, 서, 추서의 윤리적 의미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공공성과 포용성의 규범적 원리로 재해석한 것이다(안외순 2010; 조미경 2023; 정재현 2021). 이와 같은 접근은 이주민의 역량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3. 연구의 함의와 한계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기술 중심의 행정체계가 아닌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다문화 거버넌스 연구는 사회통합, 시민 참여, 협력적 행정체계 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인공지능 윤리 연구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기술 규범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Jobin, Ienca, & Vayena 2019; Floridi et al. 2018). 그러나 두 연구 영역 모두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로 체계화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신독, 서, 추서를 규범적 분석틀로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역량접근법과 다산의 실천철학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역량접근법이 이주민의 실질적 자유와 역량 확대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다면, 다산의 실천철학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과 공공성을 설명한다. 이론적 결합은 정책의 목표와 정책 운영 원리를 하나의 분석 체계 안에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기존의 이주다문화정책이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였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이주민의 참여, 협력적 의사결정, 정책 환류를 하나의 순환적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보다는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정책의 수혜자 또는 관리 대상에서 정책 형성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로 재조명하였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일방적인 적응이나 동화가 아니라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이주민이 함께 공공성을 실현하는 협력적 과정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거버넌스 연구를 확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는 미래사회에서 포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디지털 거버넌스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 및 규범적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제안된 거버넌스 모형은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적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국가 간 정책 환경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비교하지 못하였으며, AI 기반 공공서비스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주다문화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신독 기반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행정,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참여, 다문화교육 정책 등을 대상으로 모형의 설명력과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의 신독을 현대 디지털 기술의 개념과 구별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의 규범 원리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다산의 실천철학과 현대 거버넌스 이론 사이의 이론적 접점을 확장하고, 기술과 인간, 효율성과 공공성, 정책결정자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새로운 규범적 모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행정 효율성과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윤리와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로 설명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신독, 서, 추서를 현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규범적 원리로 재해석하고, 역량접근법과 결합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신독을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원리로, 서를 관계적 이해의 원리로, 추서를 제도적 실천의 원리로 체계화함으로써,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거버넌스 논의와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역량접근법이 제시하는 이주민의 역량 확대와 다산의 실천철학을 통합하여 정책의 목표와 정책 운영 원리를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정책 기획, 설계, 집행, 평가가 윤리적 성찰과 정책 환류를 통해 순환하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산의 철학을 현대 기술과 동일시하거나 디지털 기술의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다산의 실천철학이 지닌 윤리적 가치를 현대 공공정책의 규범적 기준으로 재해석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설계하기 위한 철학적 토대를 제안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정책결정자의 책임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개념적·규범적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적용 효과를 실증적인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지 못한 한계 역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지방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밀집 지역의 AI 기반 행정통역 및 상담 서비스나 다국어 민원처리 플랫폼을 사례로 신독 기반 윤리적 영향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 과제로 요구된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수준, 이주민의 참여 정도, 정책성과 간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국내외 사례를 활용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면, 본 연구가 제안한 거버넌스 모형의 설명력과 활용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행정을 더욱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다. 공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기술의 기능적 팽창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책임을 함께 구현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다.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모호보다는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정책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규범적 거버넌스 모형이다. 이 모형이 디지털 시대 사회통합정책의 새로운 논의를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석무(2015).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1-668쪽.
- 안외순(2010). 茶山 丁若鏞의 관용(tolerance) 관념 : 서(恕) 개념을 중심으로, 〈동방학〉 (19), 235-262쪽.
- 이승형(2025). AI 시대 자율성 개념의 철학적 재구성: 포스트 휴머니즘과 퇴계 ‘경(敬)’ 사상의 창조적 대화, 〈교육사상연구〉 39(2), 55-93쪽.
- 이영경(2011). 정약용의 윤리사상에서 도덕적 자율성과 상제의 문제, 〈대동철학〉 0(54), 1-27쪽.
- 정약용 저, 이지형 역(2010). 『논어고금주 2』, 사암.
- 정재현(2021). 인공지능으로 유교성인 만들기: 한국철학의 정초를 위한 실험철학적 시론, 〈동양문화연구〉 35, 91-122쪽.
- 조미경(2023). 『대학공의(大學公議)』를 통한 인성 개념의 탐구, 교육연구논총, 44(4),

5-30쪽.

진윤주 · 홍문숙(2025). 글로벌사우스 이주노동자의 정주와 웰빙 -역량 접근법과 불리함 개념의 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1(0), 95-112쪽.

한형조(2021). 조선 유학의 거장들: 정약용. 문학동네.

Ager, A., & Strang, A.(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pp.166-191.

Ansell, C., & Gash, A.(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pp.5-34.

Castles, S., de Haas, H., & Miller, M. J.(2005).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The Journal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27(6), pp.537-542.

Dados, N., & Connell, R.(2012). The Global South. *Contexts*, 11(1), pp.12-13.

Emerson, K., Nabatchi, T., & Balogh, S.(2012).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1), pp.1-29.

Eubanks, V.(2018). *Automating inequality: How high-tech tools profile, police, and punish the poor*.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Floridi, L., et al.(2018). AI4People—An Ethical Framework for a Good AI Society: Opportunities, Risk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Minds and Machines*, 28(4), pp.689-707.

Grigoropoulou, N.(2021). The Malevolent Benevolence: What happens to perceived immigrant threat when value priorities collide?. *Ethnic and Racial Studies*, 44(16), pp.126-148.

Jobin, A., Ienca, M., & Vayena, E.(2019). The global landscape of AI ethics guidelines. *Nature Machine Intelligence*, 1(9), pp.389-399.

Kim, B., Wen, R., Zhu, Q., Williams, T., & Phillips, E. K.(2021). Robots as Moral Advisors: The Effects of Deontological, Virtue, and Confucian Role Ethics on Encouraging Honest Behavior. *HRI 21 Companion*, pp.213-217.

Kymlick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Lazzari-Dodeler, N., Albert, M.-N., & Houle, C.(2025). Benevolence as a

- determining factor in the social regul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The case of an organization aiming to include immigrants. *Revue Interventions économiques*, 73(0), pp.1-19.
- Menjivar, C., & Kil, S. H.(2002). For their own good: Benevolent rhetoric and exclusionary language in public officials' discourse on immigrant-related issues. *Social Justice*, 29(1/2), pp.160-176.
- Mitra, N., & Bhaumik, P. M.(2025). Forgiveness: A conceptu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y Sciences*, 7(2), pp.22-27.
- Nussbaum, M. C.(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Belknap Press.
- Nussbaum, M., & Sen, A.(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 O'Neil, C.(2016).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New York, NY: Broadway Books.
- Rhodes, R. A. W.(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Sen, A.(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Smilan-Goldstein, R.(2024). Protecting our (white) daughters: U.S. immigration and benevolent sexism. *Politics & Gender*, 20, pp.296-317.
- UNESCO(2021).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1: Inclusion and education: All means all. Paris: UNESCO. ISBN 978-92-3-100433-9.
- Vo, T.(2023). Southeast and East Asian immigrant women's transnational postpartum experiences: A meta-ethnograph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32, pp.1556-1568.

필자 소개

성 명 황미혜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전자우편 wineg@hanmail.net

성 명 최리파
소 속 동아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전자우편 lolitha@naver.com

성 명 하명희
소 속 동국대학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전자우편 psywca@naver.com

■ Abstract

A Sindok-Based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Model - Focusing on Dasan Jeong Yak-yong's Principle of Reflective Praxis -

Hwang, Mi-hye · Choi Litha · Ha, Myung-he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Dong-A University ·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Sindok-based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model that embeds policymakers' ethical self-reflection throughout the entire policy process and presents a normative framework for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Drawing on Dasan Jeong Yak-yong's concepts of Sindok(self-reflective integrity), Seo (empathetic understanding), and Chuseo(ethical extension into practice), and integrating them with Sen's Capability Approach, the study construct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proposed governance model.

The findings indicate that Sindok functions as a normative principle of ethical reflection and public accountability, whereas Seo and Chuseo operate as relational principles that recognize migrants as active agents while respecting their capabilities and lived experiences.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study develops a cyclical governance model that integrates policy planning, design,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Rather than emphasizing technological efficiency alone, the proposed model highlights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policymakers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as essential conditions for human-centered digital governance. This study contributes a normative framework that bridges Dasan's practical philosophy with contemporary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www.kci.go.kr

[Key words] Digital Transformation, Sindok, Dasan Jeong Yak-yong,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Capability Approach

투고일 2026. 06. 19 / 심사일 2026. 07. 16 / 게재확정일 2026. 07. 21